

I. 개요

1. 일시 : 2014. 12. 05. (10:00~12:00)

2. 장소 : KIEP 11층 회의실

3. 발표자 : 원도연 외교부 과장

4. 참석자

김소영(서울대, 교수)
김인철(성균관대, 교수)
김정식(연세대, 교수)
김태준(동덕여대, 교수)
박영준(아주대, 교수)
송치영(국민대, 교수)
이영섭(서울대, 교수)
채희율(경기대, 교수)
최지영(기획재정부, 서기관)
이일형(KIEP, 원장)
윤덕룡(KIEP, 선임연구위원)
이상미(KIEP, 전문연구원)
김수빈(KIEP, 연구원)

5. 제 목

- G20브리즈번 정상회의 브리핑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먼저 원장님의 2014년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었음.

- 올해의 정상회의는 각 이슈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견 조율이 다소 부진하였음.

- 그러나 Sherpa 회의 때 논의된 사안이 정상회의에서 동일하게 논의되면서 각 의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음.

□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한 금년 G20 정상회의의 대주제는 1) 세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2)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 3) 국제제도 분야의 협력 강화였음.

- '제1세션. 세계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는 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 고용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G20 종합적 성장전략' 마련에 합의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제시

*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유럽 디플레 우려, 신흥국 성장동력 약화 등을 세계경제 하방위험으로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G20 정책 공조를 강조함.

*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 민간투자 등을 유인하기 위해 Global Infrastructure Hub를 설립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 ‘leading practices’를 마련
 - * 시장 경쟁 강화, 반독점법의 효율적 집행,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을 강조하고, ‘고용계획(Employment plan)’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을 당부
- ‘제2세션. 세계경제 회복력’에서는 금융 시스템 강화, 국제 조세 시스템 및 IMF 개혁 등을 논의
 - * ‘대마불사’ 해결 방안, BEPS 액션플랜,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및 이행계획 등을 마련
 - * 2010년 IMF 개혁안에 대한 미 의회 비준 지연으로 후속 쿼타 검토의 완료 시한도 1년 연장
- ‘제3세션.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협력 증진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기후변화 대처방안 등을 논의
 - * 국제 에너지시장 개선, 가스시장 안정성 확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G20 차원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
 - * 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중요성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UNFCCC, 2015년 개최 예정)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필요성 확인
- 의장국인 호주는 위의 3대 핵심주제를 위주로 간결한 정상회의 선언문(안)을 채택하였음.
 - 투자, 경쟁, 고용, 무역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잠재성장을 견인해야 함.
 - * 5년 뒤 G20 전체 GDP를 현 추세보다 2% 이상 추가 상승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수요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병행하기로 함.
- 위기 재발과 국가간 정책 차이를 이용한 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금융·조세 관련 제도 및 관행을 국제적으로 조율하기로 함.

- IMF 구조 개혁, WTO 체제 강화 및 발리 합의사항 이행, UN 기후 변화 협약 이행, 에너지 시장 강화를 위한 원칙 마련 등 국제협력이 긴요한 분야의 미래지향적 정책공조 시도와 이에 대한 G20 정상들의 정치적 지지를 천명

2) 토론 내용

- 앞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일부 신흥국의 환율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짐.
 - 최근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저유가 현상, 선진국 통화정책, 유로지역 경기 회복 부진 등을 둘러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임.
- 신흥국은 국제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통화국과 환율제도 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교환성통화국과 비교환성통화국간 환율 공조가 필요함.
-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진한 상태임.
 - 또한 성장, 일자리 창출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일정한 소득수준 하에 실질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필요
- 내년 의장국인 터키의 아젠다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터키가 강조해온 주요의제(무역, 글로벌 거버넌스 등)에 대해 워킹그룹 선도, 국제기구와의 협동연구 등을 제안하는 방안이 있음.
- 창조경제의 전파를 위해서는 인력과 자본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며

젊은 인력의 국가간 이동, 벤처자본의 대(對)신흥국 투자, 모범 사례 공유 등이 필요함.

- 창조경제 전파에 있어 G20 국가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자국 현황에 맞게 조율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창조성이 중요한 ICT 분야를 향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임.